

# '전북 제3금융지 조속 지정을'

### 이명연 도의원, 책임회피성 발언 일관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 발의 부산 지정 기준과 다른 '선 인프라, 후 지정' 요구 금추위 이중성 지적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1)은 9일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을 허용한 반면, 현재 전북지역에만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독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금추위의 이중성을 규탄했다.

현재까지 국내의 6개 자산운용사를 유치했고, 올해 25명의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했으며,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 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위원장의 발언은 전북의 가치화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마치 모든 원인이 전북의 인프라 부족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돼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정부위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전북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의 권고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답을 줘야하지 않겠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금추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금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축을 가는 보수야당 측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껏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금추위의 이중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추위는 지난 2009년



도의회 정례회 개최하기 전 국민의례 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의 개최식에 송해진 도지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교원승진인사, 교과목별 안배 필요"

#### 박용근 도의원 "장학사 등 임용시 우선 대상자 선정을"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9일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장학사·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 승진인사시, 교과목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 전체 중등교원 8,556명 중 교장급(학교장, 장학관, 연구관)은 366명으로 4.28%, 교감급(교감, 장학사, 연구사)은 359명으로 4.20%, 즉 교원의 8.5%는 교감급 이상으로 승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교과 교사들은 공시립 전체 인원 334명중 단 17명(5.09%)만이 교감(장학사포함) 이상으로 승진해 평균인 8.5%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교감급은 단 4명(1.2%)에 불과해 기계급속 교과의 교감 승진비율 14명(12.2%)과 대조를 이뤄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용근 의원은 "현재의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 제도가 편파적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교원 인사시 과목별 성별 등 특정 분야에 승진이 치우치지 않도록 인사권자가 조정을 통해 목목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의 교원승진 시스템은 10개의 교과군으로 묶어 인사를 하기때문에, 같은 교과군으로 묶인 교과목별로 경쟁을 하게되는데, 가령 A라는 교과군에 5개 과목이 있다면 10명의 승진 소요 발생시 특정 교과과 승진을 독식해 자칫 인사에서 소외당하는 교과목이 발생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만경강을 생태관광 메카로"

#### 두세훈 도의원



두세훈 도의원이 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적극행정을 통해 전북의 젓줄 만경강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잠재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생태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의원은 "전북의 경우 만경강에 1,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후 3급수로 살아 숨쉬는 만경강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양천과 만경강이 만나는 회포대교부터 하리교까지 약 2km에 걸쳐있는 '신천습지'는 습지보전 등급 '상'으로 분류된 지역이

고, 도내 주요 도시들에 인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두 의원은 "최근에 만경강 둔치 일부가 친수구역 등으로 지정되며 만경강을 생태관광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한 모든 여건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은 "이제는 전북도가 적극행정을 통해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만경강을 습지, 갈대숲 체험과 자전거라이딩, 낚시 체험 그리고 달빛 생태숲 체험을 통해 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잠재된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지역개발 소외지역 위한 대책을"

####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9일 제3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개발 소외로 고통받아온 고창군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경찬 의원은 "33km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해 모래 구름지,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바다 환경 변화로 소중한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고창군 지역민들이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성경찬 의원은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이 15년째 표류돼 지역민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전북도 몫으로 배정된 100MW 발전사업의 일부분을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군에 배려했어야 했다"며 고창군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 "전북도 해운항만 전문가 채용을"

#### 나기학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 1)의원은 9일 "항만물류학문 연구를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북도 행정에 참여시켜 군산항 발전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고 주장했다.

나기학 의원은 "현재 군산항은 항만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

하고 있고, 하역사가 부두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산항은 항만공사가 없어 활성화 전략을 관(官) 주도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정작 전북도청은 항만물류정책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유호상 기자

##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허울에 불과'

### "산재보험 미가입 유도·악용 사례에도 근본적 대안 내놓지 않아" 최영심 도의원, "생활물류서비스 발전 법안, 20대 국회에 이어 6·10월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 법안 통과해야" 촉구

"내가 없이 새벽부터 이어지는 택배 분류 작업인 공짜노동에 이어 택배 무게와 부피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수수료, 비이성적 수익구조 개선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해"



"지난 2017년 4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개선은커녕 더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이런 비참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당리당락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과 10월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택배 본사가 산업 재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의무화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이 납부주체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주체가 대리점과 노동자에게 지금까지 산재보험 미가입을 유도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연택시대에 택배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 서비스"며 "택배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공짜노동과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유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규제와 더불어 택배회사의 이행을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최영심 의원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위해 하루 빨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권익위와 행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보내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이성적인 택배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등한 수익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 "조합원에 의한 완전히 새로운 노조 만들 것"

###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 당선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7대 전북노조 선거에서 위원장(2021년 1월~2023년 12월)으로 당선됐다.



송 당선자는 조합원 1,024명이 참여(87.9%)해 677표(66.2%)를 득표했으며,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는 조합원들의 그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오직 조합원만 보고 뛰고 또 뛴 것을 약속했다.

송상재 위원장은 그간 전북노조 제2대 조직부장을 시작으로 제6대 부위원장까지 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조합원들에게 경험과 준비된 노동조합 일꾼으로 인정받아 왔다.

송상재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조합원들에 더 나은 자제로, 더욱 가까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부당,불합리에 강력 대응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면서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노동민들에게도 신뢰받는 전북노조, 강한 전북노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7대 전북노조는 '완전히 새로운 노동조합, 그 첫걸음' 조합원과 함께 열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조합원 뜻을 존중해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유호상 기자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조속 처리를"

### 이한기 도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개선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북도와 전남도, 충남도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이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유호상 기자